

대학교육의 문제점들

김 창 국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교육문제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다. 교육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식 키워본 사람이면 한 마디 의견쯤은 말할 줄 안다. 게다가 보통 사람들은 남의 장점은 잘 보지 못하면서도 단점은 쉽게 찾아내기 마련인데, 대학교육에 관한 필자의 의견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평소 느낀 대로 몇 마디 적어 본다.

우리나라 교육의 첫번째 문제점은 교육의 핵심이 대학교육에 있고, 그 결과 중·고등학교의 교육은 대학입시의 준비과정으로 전락한 데에 있다.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욕망은 과열과외와 입시부정 등으로 이어져 숱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그 중에서도 서울대학교로만 쏠리는 열기는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제일이라는 교육열과 실력보다는 지연 및 학연을 중시하는 우리의 연고주의 문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역대 정권의 교육에 대한 철학 부재 내지는 무정견에 보다 큰 책임이 돌아가야 한다. 한국은 '서울대의 나라'라는 냉소적인 표현이나, 서울대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서울대 망국론', 그리고 아예 '대학을 없애야 우리가 산다'는 주장 등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지난해 어느 재벌그룹이 신입사원 채용에서 학력을 보지 않겠다는 '학력 철폐선언'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사람을 써 보니까 대학 졸업자라 해서 또는 일류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더 나을 것이 없더라는 경험에서 우리나라 방침 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일이다.

대학교육의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그 목표 설정의 불명확성을 들 수 있다. 교육법 제 108조는 대학의 목적에 관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 이라고 정의해 놓았다. 법조문의 표현이 추상적이긴 하나, 대학은 순수한 학문연구와 전문기능교육 및 인성교육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현실은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취업을 위한 교육기관'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는 느낌을 지워버리기 어렵다.

법학교육에서도 그 목표를 법조 실무가 양성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교양교육 중심이어야 하는지를 두고 오래 전부터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바, 이는 법학교육 파행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일부 개혁론자들에 의해 추진되었다가 빛을 보지 못한 로스쿨제나 법학전문대학원 안도 결국은 법학교육 목표 설정의 불명확성에서 비롯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주동이 된 사법개혁 작업이 사시 합격자 수를 대폭 늘리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되었지만, 현행 제도 안에서의 내실있는 법학교육 방안은 강구하지 않은 채 합격자의 대폭 증원만 결정함으로써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법과대학의 고시학원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서울대의 경우 인문계열 학생의 약 20%가 사시준비를 하고 있고, 과거 사시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이 사표를 내던지고 고시촌으로 모여들고 있다 한다. 이는 일부 개혁론자들이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비현실적인 명제에만 집착한 결과라 하겠다. 법학교육의 정상화도 그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편, 대학사회의 문제점으로서 부조리한 사례를 들자면 교수임용 부조리와 교육행정 관련 비리를 빼놓을 수 없다. 교수임용에서의 부정 및 불공정은 대학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모교출신 우대에서부터 금품수수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수의 임용이 부정 또는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사태를 방지한다면 대학교육의 정상화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 뻔하므로, 교수임용 과정의 공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폭넓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교육행정에 관련된 비리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어디 한 군데라도 비리와 부조리 없는 곳을 찾기 힘든 우리의 현실이긴 하지만, '정부 부처 가운데 교육부가 가장 권위주의적'이고 '교육행정가들의 사고와 의식의 변화가 다른 기관 행정가들보다 뒤져 있다'라는 평가나, '교육부에 출입할 때마다 봉투 몇 개씩을 준비해야 했다'는 어느 보직교수의 실토(약 3년 전에는 얘기다)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교육행정은 다른 어떤 행정분야보다도 이해집단이 많고 국민들의 관심도 크기 때문에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헌법 사항이라는 사실을 교육부가 특히 명심해야 한다. ■

김창국/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검사·부장검사를 거쳐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을 지내고, 현재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묵비권에 관한 소고", "특별결사제"의 다수를 발표했다.